

6인 협의체서도 '유치원 3법' 빈손

회계 방식·처벌 조항 평행선 민주·바른미래 페스트트랙 추진 위험 외주화 방지법도 이견 확인



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국회 방문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군의 어머니 김미숙(오른쪽)씨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4일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6인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교육위 간사,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전희경 교육위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교육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유치원 3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했다.

조승래 간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계속됐던 의견 차이가 오늘 새삼 구체적으로 확인됐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날 교육위원장이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이후에는 위원장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때까지"라고 덧붙였다.

전희경 의원은 "한국당이 유치원법 통과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당도 법안을 내놓는 입장에서는 우리 법을 상대 당에서 안 해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의 질 높은 교육과 접점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인 협의

체의 추후 회동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전열 교육위원장이 정한 여야 협상 시한은 26일 오전 9시까지다. 이때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페스트트랙, 신속처리법안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신속처리법안 지정시 1년 뒤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난색을 표했으나 법안처리 자체가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채택을 위해 위원장(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이른 시간 안에 각당 간사와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와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문제 등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날 회동에선 운영위 소집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감반 문제로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고 저희는 '조사 결과나 수사 등의 진전 상황을 보고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

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해 밝혀야 한다"며 "(운영위) 소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거부 입장이) 단호하다"며 "한국당은 운영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은 운영위와 다른 문제를 결부시키려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운영위 소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위험 외주화 방지' 발목 잡는 보수당

민주당 원청 책임 강화 개정안에 난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30분 만에 정회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의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로 전환해 합의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상우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쟁점이 너무 많다"면서 "고용노동소위 전체가 모여 회의를 열면 합의가 녹지 않지 않겠나"라며 "최대한 이견 조율을 하면 그 내용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故) 김용균 씨 유족들은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과 회의실을 방문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예

쁜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서 저처럼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는 김 씨 어머니의 요청에 임이자 환노위원장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쟁점 중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靑, 인적개편으로 국면전환해야"

SNS에 글 "초심으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대적인 국면전환으로 인적개편을 통해 집권 3년차를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한다"며 "안발에 오줌누기로 땀질하고 지그재그로 끌고 가면 실패한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잇따른 폭로에 대한 박형철 비서관의 대응에 대해 "낙제점을 지나 실수를 금할 수 없다"며 "그는 하루라도 빨리 비서실을 떠

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첩보이첩목록 논란에 대해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자기 식구의 승진을 위해서는 불법사찰서류도 발부한다던 진짜 구차하고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크고 작은 사고도 너무 많다. 비서실 내각 여당의원들도 기강해이로 엉망이다"라며 "북경노적사, 즉 북핵 지원, 경제 민생 혼선, 노동계 저항, 적폐청산 피로, 사법부 붕괴 5대 쓰나미가 밀려온다. 이대로는 도저히 호미로 막을 일 가래라도 못 막는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靑 특감반·경제난 '쌍끌이 총공세'

조국 운영위 출석·소득주도성장 폐기 등 연일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약제가 꼬이면서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 침체 국면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이 확산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데드크로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제친 현상)가 나타난 상황이다. 여기에 김정은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세가 점점 커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소나기는 피하자'는 분위기가.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국민 사과 등 김 의원의 '공항 갑질'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모든 의혹에 일일이 대응해 오히려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한국당으로 돌리며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회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수 야당의 비협조로 난항"이라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논의도 서둘러야 하며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제2의 김용균씨와 구의역 검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

고위는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안전진급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시작한 '정책(경제+정책)투어'를 마무리 짓고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생 현안을 정책과제로 만들어내면서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를 놓고 쌍끌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현 정부에 '경제 무능'과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낙인을 찍어 연말-연초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에 대한 내용은 불순물로서 바로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폐기되지 않은 점, 특감

반장이 민간인 사찰을 보고 받았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해야 했지만 도리어 승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사실을 확인해준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 소집과 1년 6개월 이상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반 임명을 촉구했다. 최재인 금 적용 대상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 송년 만찬을 하면서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낙관과 신념을 가지라고 했는데, 국민이 다 잘못됐다, 힘들다"고 하는 정책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낙관을 가지라고 하다니 대통령이 아니고 불통령"이라고도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아픔이 어디 있는지 성찰해달라"고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국정지지율 47.1%

리얼미터...3주만에 최저치 경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7.1%로, 3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내린 47.1%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주간 기준 최저치는 지난 11월 4주차 때 기록한 48.4%였다.

'국정 수행을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0.7%포인트 내린 46.1%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2.0%포인트) 내린 1.0%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30.3% vs 부정 62.0%)에서 하락폭이 6.8%포인트로 가장 컸다. 연령별로는 20대(46.4% vs 42.2%)에서 4.9%포인트로 가장 큰 내림폭을 보였고, 직업별로는 학생(40.1% vs 50.1%)에서 하락폭(12.7%포인트)이 가장 컸다. /연합뉴스

이제 노안과 백내장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신세계안과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

- 기존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낭 절개를 수기로 진행
- 카탈리스 노안·백내장 수술은 3D OCT 통해 안구 상태 실시간 확인
- 안구 스캔 후 자동으로 3D 알고리즘을 통한 정밀 분석
- 3D 펄스레이저 레이저 시스템으로 정교한 수술 가능
- 3차원 입체절개 방식으로 개개인의 정확한 맞춤 난시교정 가능
- 개별 맞춤형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으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시력 가능
- 자동 안구보호 시스템으로 수정체낭 파열, 홍채 손상 등 합병증 방지
- 레이저 최소절개 수술로 다음날부터 돋보기 없이 일상생활 가능

1566-9988 **신세계안과**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